



등록번호	기획감사실-5687
등록일자	2021. 04. 01.
결재일자	2021. 04. 01.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감사계장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1. 4. 1.
협조자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으로 확실한 주민체감을 위한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 영 구
(기획감사실)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요약)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으로 확실한 주민체감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2021년 추진목표

-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으로 확실한 주민체감

□ 세부 추진과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

○ 적극행정 문화 정착

- ▷ 적극행정 우수사례 ·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 (대상 확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비정규직 직원 등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대상으로 확대 **NEW**
- ▷ 적극행정을 통한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과제 선정
-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NEW**
 - ☞ (도입 목적)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 적극행정 교육 · 홍보

○ 적극행정 지원 · 보호

- ▷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 운영

○ 소극행정 예방 · 개선

- ▷ 소극행정 점검 및 처벌 강화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2020년 추진성과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 운영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2회/7명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 적극행정 면책 기준 신설
- ◆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실시 ☞ 비대면 직장교육, 사이버교육

목 차

I . 추진개요	3
1. 추진배경	3
2. 추진방향	3
II . 2020년 실행 성과	4
III . 2021년 실행 방향	5
IV . 세부 실행 과제	6
1. 적극행정 문화 정착	6
1-1.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등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6
1-2. 적극행정을 통한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과제 선정	7
1-3.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8
1-4. 적극행정 교육 · 홍보	11
2. 적극행정 지원 · 보호	12
2-1.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12
2-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5
2-3.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 운영	17
3. 소극행정 예방 · 개선	18
3-1. 소극행정 점검 및 처벌 강화	18
3-2.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19
V . 향후 계획	21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경직된 공직문화에서 탈피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하여, 확실한 주민체감도 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하여, 아름다운 도시 더 행복한 수영구를 구현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추진배경

- ('19년, **구축**) 정부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19.3)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 구축 및 공직사회 불입 촉진
- ('20년, **확산**) '19년 구축된 적극행정 제도는 '20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 → K-방역 성과와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지원
- ('21년, **체감**) 코로나19 방역 적극행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주요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여 주민체감 성과달성에 주력

□ 추진방향

- (적극행정 문화 정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인센티브 부여(반기별),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국민신청제 시행 → 적극행정 불입 촉진
- (적극행정 지원·보호) 사전컨설팅 감사·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및 소송 지원
→ 적극행정 주민체감을 위한 제도적 뒷바침
- (소극행정 예방·개선) 소극행정 점검 및 처벌 강화,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운영

Ⅱ. 2020년 실행 성과

□ 적극행정 추진 기반 마련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 2020. 6월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 2020. 8월
(적극행정 면책 기준 신설)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 수영구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0. 6월 ~
(구 성) 위원 : 11명(위원장 부구청장) ☞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
(운 영) 2회 개최 ☞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및 우수공무원 선발(7월, 12월)

□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센티브 부여 ☞ 2020. 7월, 12월
(선 발) 7명 ☞ 상반기 : 3명 / 하반기 : 4명
(인센티브) 성과급 최고등급(1), 승진 가점(2),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4)
-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실시 ☞ 2020. 7월 ~
(직 장 교 육) 전문강사 초빙 강의녹화 후 수영구 E-Learning 센터 게시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이수
→ (수료인원) 직장교육 : 593명 / 사이버교육 : 539명

□ 소극행정 점검

- (고충)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 2020. 6월
 - ▷ 민원서류 처리 지연 : 204건
 - ▷ 민원서류 신청 수수료 징수 부적정 : 7건

Ⅲ. 2021년 실행 방향

비전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으로 **확실한 주민체감**
아름다운 도시, 더 행복한 수영 구현

전략

- Ⅰ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주민소통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
- Ⅱ 적극행정 **지원·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바침**
- Ⅲ 소극행정 **엄정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예방**

3대 추진방향

9대 핵심과제

적극행정 문화정착

-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등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NEW**
- ② 적극행정을 통한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과제 선정
- ③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NEW**
- ④ 적극행정 교육·홍보

적극행정 지원보호

- ⑤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 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⑦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 운영

소극행정 예방개선

- ⑧ 소극행정 점검 및 처벌 강화
- ⑨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IV. 세부 실행 과제

1

적극행정 문화 정착

1-1. 적극행정 우수사례 · 우수공무원 등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 우수공무원 등 선정

- (시기) 반기별 실시(7월, '22.1월)
- (인원) 반기별 4명 내외
- (대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직, 비정규직 직원 등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대상으로 확대 **NEW**

○ (요건)

- 국가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 · 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위해 노력한 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적극행정을 통한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과제로 선정되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시 우선 고려

○ (기준)

-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절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5호)
- **(인센티브 유형)** 특별 승진,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특별휴가,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실적 가산점 부여 등
- **(개인희망 고려)**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대상자 희망을 고려
- **(보상의 시차 단축)** 보상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빨리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

1-2. 적극행정을 통한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과제 선정

□ 2021년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 **(선정이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공모사업 발굴·추진으로 국비 재원을 확보하여 구 재정 여건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 공모사업 추진 지원팀을 구성하여 부서별 공모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략 공유로 선정 가능성 향상
 - ▶ 공모사업 추진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 강구로 동기부여
 - ▶ 추진현황 관리 및 결과 분석체계 구축으로 차년도 준비

○ (추진 세부계획)

▶ 공모사업 추진 지원팀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21. 3월부터
- 역할 : 공모사업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컨설팅
- 구성현황

구 성 원		+		α	
■ 공모총괄 지원	기획홍보계장			■ 유경험 직원	상황별 지정
■ 예산재정 지원	예산계장			■ 전문가 (교수 6명)	아이디어뱅크위원회 정책매니저
■ 조직법률 지원	조직법무계장				
■ 적극행정 지원	감사계장				

▶ 추진 체계



▶ 직원 사기진작 방안

- 20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선 고려

1-3.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21.6월~) NEW

◇ 국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이 공무원에게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제’ 도입

○ (도입목적)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요청

❖ (민원과의 차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공익적 문제에 대해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반 민원과는 그 취지와 활용 가능한 수단에서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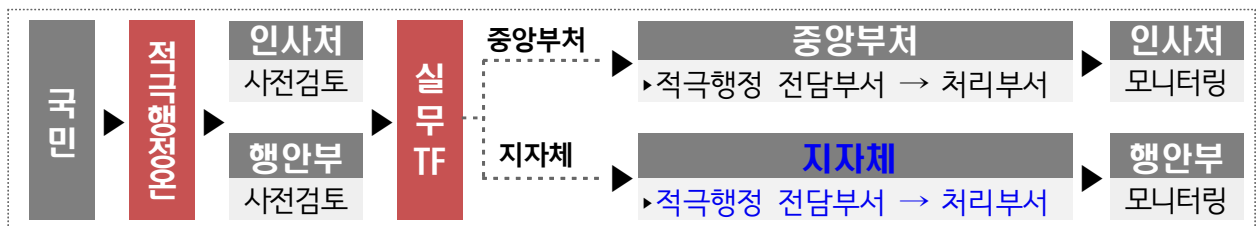
○ (신청요건)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 가능

신청 대상	예외 대상
<p>➢ 신청 대상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可</p> <p>☑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p> <p>☑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p> <p>☑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p>	<p>➢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不可</p> <p>☒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p> <p>☒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p> <p>☒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p> <p>☒ 신청하려는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인 경우</p> <p>☒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p> <p>☒ 국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p> <p>☒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p>

○ (운영절차) 시범 운영 기간('21.6.~12.)동안 '적극행정실무TF*' 에서 각하 여부 1차 판단

- 시범운영 종료기간 이후('22.1~)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각하 여부 1차 판단

* 매월 회의 개최 / 국조실 주관 / 인사처·행안부·권익위·법제처·교육부·기재부 등 참여



○ (세부 추진절차)

① 신청 및 접수	② 처 리	③ 사후관리
-----------	-------	--------

▶ (신청인) 국민신청제를 통해 신청을 제기하는 개인·법인·단체

▶ (신청요건) ① 공익적 목적 ② 2차 신청 ③ 반려·불채택 사유 3가지

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

* '공익적 목적'이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을 의미

② 타 민원·제안 창구를 통해 기 신청했으나 반려 또는 불채택된 사안

구분	타 민원·제안 창구 예시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신문고(일반민원, 예산낭비 신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신청(전자문서, 문서 등) ▼구술(口述) 및 전화로 신청한 민원은 인정되지 않음(기타민원)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신문고(일반제안, 예산절감 제안, 일반·공모·공개·실시제안) ▲청와대 청원, 국회 청원 ▲국민생각함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

③ ▲법적 근거 미비 ▲불명확한 법령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법령’ 중 1가지 이상의 이유로 인해 반려 또는 불채택된 사안

- ▶ (신청방법)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의 ‘국민신청제’ 코너에서 신청
 - 신청인의 하루 최대 신청 가능한 횟수는 3회로 제한되며, 동일 안전에 대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할 경우 최초 안전을 제외하고 반려 가능

① 신청 및 접수		② 처 리		③ 사후관리		
적극행정 온	▶	적극행정 실무TF	▶	적극행정 전담부서	▶	처리부서
신청서 작성		1차 각하여부 검토		처리부서 지정		검토 및 처리

- ▶ (적극행정 실무TF) 각하 여부를 1차 판단, 각하되지 않은 안전은 담당 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전달
- ▶ (적극행정 전담부서) 각하여부 2차 판단, 처리부서 지정 또는 이송 신청
- ▶ (처리부서 역할) 국민신청 내용을 지정 받은 처리부서는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법령·규정에 대한 유연한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추진 가능한 경우 미활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및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결과보고
 - 신청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처리에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명백하게 처리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및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결과보고
 - 소극적인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 결과 통지 시 부서장 결재 필요

- ▶ (진행상황 관리) 인사처·행안부 및 각 기관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진행현황에 따라 ‘적극행정 온’의 신청 건별 진행상황* 수시 관리
 - * ‘적극행정 온’을 통해 소관 신청 게시물의 ‘진행상황’ 변경 가능
- ▶ (적극袤 보고)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국민신청제 추진 현황*을 적극행정 위원회에 월별 보고
 - * 국민신청제 접수 건수, 처리 현황(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처리/미활용 처리/반려 비율, 수용/불수용 비율, 처리부서 지정 현황 등)
- ▶ (실적 제출)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袤에 보고한 국민신청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행안부(지자체)에 제출
- ▶ (모니터링) 행안부는 국민신청제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담당부서에서 적극행정 제도 활용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

1-4. 적극행정 교육 · 홍보

□ 적극행정 교육

- (직장교육) 연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
- (사이버교육) ‘적극행정의 이해’ 등 사이버과정 정원대비 50%이상 이수 추진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추진시기
직장교육	■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 실시(연 1회)	'21. 6 ~
사이버교육	■ 나라배움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전직원 50%이상 이수	연중

□ 적극행정 홍보

- (홍보콘텐츠 활용) 區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및 SNS에 행안부·인사처 제공 카드뉴스·웹툰·홍보영상 등 게재
- (홍보물 제작)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사례집,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 및 홍보 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배포
- (언론보도) 각종 적극행정 관련 행사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보도자료 배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추진시기
홍보물 제작	■ 우수사례 카드뉴스, 사례집, 동영상 제작 등	'21. 7 ~
언론보도	■ 적극행정 관련 행사 및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연중

2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2-1.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절차) 區의 소속기관·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부산광역시·감사원·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 **(효력)** 부산광역시 ·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추진배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사전컨설팅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지원 창구를 다양화하며, 공무원을 중첩적으로 보호
- **(의견제시 절차)**
 - ▶ (신청)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의견제시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

< 의견제시 신청 서식(예시) >

신청부서		신청인		사전컨설팅 신청 여부	Y □ / N □
건명					
1.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 1) 관련 법령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신청 사유 1) 신청 배경 2) 주요 쟁점 3) 이해관계 범위 4. 참고 사항 1) 중앙부처 법령해석 결과 2) 사전컨설팅 검토 의견					

▶ (검토) 의견제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책임관(간사)이 안전의 중요성·시급성 검토

-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거나 답변을 받은 것이 안전 제한사유*는 아니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시 사전컨설팅 의견을 참고자료로 활용

* 관계법령이 명확한 경우, 단순 민원해소 목적인 경우,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제한 사유를 전담 부서에서 규정·운영

- 접수 후 가까운 정기회의 안전으로 제출하되, 답변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수시회의 또는 서면회의 등 활용

▶ (심의)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방식과 동일

○ (의견제시 효과)

▶ (징계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 등에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등 면제

▶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면책 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 의견 제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면책 건의 가능

< 참고사항 >

▶ 의견제시 면책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2.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 징계요구 등 면책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근거규정 : 「감사원법」 제34조의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 ▶ (개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감사원법 제34조의3)
- ▶ (면책기준)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등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 (신청에 의한 면책) 실지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 여부 검토
- ▶ (현장 면책) 감사단이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감사 종료 전 감사마감회의에서 면책 여부 통지

○ (정부합동감사 등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 ▶ (개요) 지방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

- ▶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 업무 전반(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감사·특정 감사·복무감사)
- ▶ **(면책기준)**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동일
 -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 제외
- ▶ **(면책절차)** 면책여부 심사를 위해 면책심의회 구성·운영
 - 사안이 간단한 경우 감사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결정하며, 복잡한 사안은 감사 후 적극행정면책심의회를 통하여 면책여부 결정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

- ▶ **(면책기준)** 면책기준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의 적극행정 면책과 동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 **(면책절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운영

□ 징계 등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제한하고, 징계의결 전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제17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 면제

- ▶ **(개요)**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	
1 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기 존	개 정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2-3.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 운영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9조, 제21조, 제22조

□ 구상권 행사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행정으로 인한 손해발생인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

□ 법률적 지원

- **(소송비용 지원)**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소송비용 회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소극행정 예방 · 개선

3-1. 소극행정 점검 및 처벌 강화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필요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업무형태(유형-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 소극행정 점검

○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등 중점 점검 실시

- 소극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 사항으로 처리
-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추진시기
제도개선	■ 소극행정 징계양정에 따른 처분 요구	즉시
업무개선	■ 소극행정 행태 중점 감사(감찰) 실시	수시

3-2.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 근거규정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 소극행정 신고센터

- ### ○ (민원 접수 처리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민원 접수처리 세부절차)

① 소극행정 민원신청 : 민원인

- 민원인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민원 신청(온라인, 우편접수 등)
- 민원인이 소관기관을 직접 지정

② 소극행정 접수 : 감사부서

- 민원인이 신고센터에 민원을 신청한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민원을 처리부서로서 감사부서를 자동지정

③ 소극행정 여부 판단 : 감사부서

- 소극행정 민원을 사업부서나 피신고자가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 감사부서 검토 결과 소극행정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부서로 처리부서를 재 지정하되, 소극행정 민원의 피신고자는 처리 담당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예시)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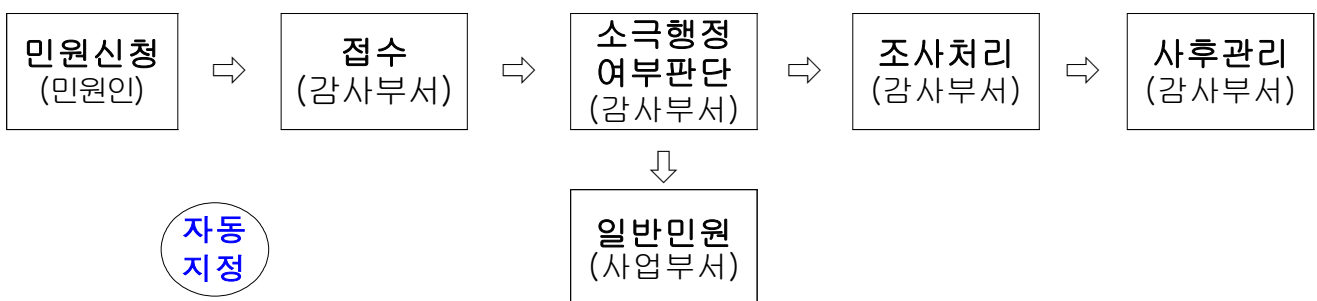
④ 소극행정 민원의 조사·처리 : 감사부서

-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 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 소극행정 민원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실시

⑤ 사후 관리

- 소극행정 민원을 처리완료하는 경우, 처리구분 항목(해결, 종결, 취하, 기타 등)을 신중하게 국민신문고에 입력

< 소극행정 민원 처리절차 >



V .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일정	소관부서
1. 적극행정 문화 정착		
○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7월, '22.1월	기획감사실 총무과
○ 적극행정을 통한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과제 선정		
- 2021년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3월 ~	전부서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6월 ~	전부서
○ 적극행정 교육 · 홍보		
- 적극행정 활성화 직장교육 실시	6월 ~	기획감사실 (감사계)
- 적극행정 관련 나라배움터 교육 전직원 50%이상 이수 추진	연중	전부서
2. 적극행정 지원 · 보호		
○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연중	기획감사실 (감사계)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 운영		
3. 소극행정 예방 · 개선		
○ 소극행정 점검	3월, 9월	기획감사실 (감사계)
○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운영	연중	